

급변하는 자동차시장

동력 떨어지는 전기차... 안전성·상품성·독창성 '진검승부'

현대차·기아

EV3, K8 부분변경 모델 선보여
르노코리아 콜레오스 본격 인도
KGM 액티언 사전예약 흥행

국내 완성차 업계가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한국GM, KG모빌리티(KGM) 등 5개사는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와 함께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다만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침체에도 현대차·기아는 시장 경쟁력을 갖춘 신차를 내놓으며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가 발표한 8월 글로벌 판매량은 61만6814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4%(65만8718대)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르노코리아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국내 완성차 업계 만행인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33만2963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5.3% 줄어 들었다. 기아는 지난달 국내 4만510대, 해외 21만483대, 특수 645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25만1638대를 판매했다.

현대차·기아를 제외한 국내 중견 3사의 판매량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한국 자동차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한국GM은 임단협 갈등으로



KGM 액티언.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국GM은 지난달 글로벌 판매량 1만5634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0.7% 줄어 들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생산 손실이 3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영향으로 대한민국 수출 효과 상품으로 자동차가 주목 받았지만 수출량 감소로 반도체가 다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KGM은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812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24.9%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다. 내수 판매는 중형 SUV '액티언' 출시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3943대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출은 39.5% 감소한 4185대를 기록했다. 다만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8451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한 판매 실적을 거뒀다.

국내 완성차 5개사는 하반기 신차 출시와 인도를 준비하며 판매 반등을 노

리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신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과 EV3, K8부분변경 모델 등을 앞세워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전망이다.

르노코리아는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고객 인도에 나선 새로운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 E-테크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9월 본격적인 그랑 콜레오스 출고가 시작되면 르노코리아의 실적도 반등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KGM은 신차 액티언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액티언은 신차 사전예약 역대 최고 기록을 수립하며 출시 전부터 주목을 받은 KGM의 신차다. 본격 생산 및 출시 5영업일 만에 780대 판매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은 예상보다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급형 모델이 출시되면서 시장 흐름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늦어지는 자차 구매시기... 구독·대여 서비스 택했다

2021년부터 신차 판매율 감소 추세
면허 취득자 절반 이상 대여시장 진입

차량 판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자가 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신차 판매율은 정체 구간에 접어든 반면 차량 대여 시장은 성장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실제 20~39세 신규 면허 취득자의 60% 이상이 쏘카 신규 회원으로 유입되고, 자차 구매 시기는 늦어지는 추세다.

국내 신차 판매량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7~2019년까지 연간 180만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0년 190만대까지 증가했으나, 2021년부터 170만대까지 떨어졌다. 2023년 기준 누적 자동차 등록대수는 2595만대로 이미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한 꼴이다.

자동차 판매 시장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를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신차 판매량은 감소세이고, 중고차 거래량을 더해도 연간 자동차 거래량은 400만대 안팎으로 추정된다.

대신 자동차 대여 시장이 활성화되

고 있다. 신차를 고객에게 3~4년 주기로 대여해주는 장기 렌터카 업계와 쏘카와 같은 구독형 차량 임대업이 대표적이다.

쏘카는 기존 시간 단위 차량대여 서비스에 더해 월 단위 차량구독 서비스인 '쏘카플랜'을 추가했다. 쏘카플랜을 이용하면 매달 정해진 요금을 지불하고 소형차량부터 SUV까지 쏘카의 모든 차량을 월 단위로 대여할 수 있다. 쏘카플랜은 청년층에게 주목받고 있다. 취·등록세, 보험, 차량관리비 등을 신경 쓰지 않고 다양한 차량을 운전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비용이 저렴

한 만큼 자신의 주행 습관에 맞는 차량을 알아보기 위해 임시로 대여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대 4명까지 추가로 차량 운전자를 등록할 수 있어 함께 이용할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자차 구매 감소와 대여 서비스 선호 현상으로 쏘카 실적은 상승세다.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매출은 2024년 2분기 전년 동기과 비교했을 때 12.9% 증가한 825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쏘카플랜은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3.6% 증가한 73억원을 기록했다.

장기 렌터카 서비스도 약 30%의 선

납금과 월 대여료만 지불하면 3~4년 주기로 최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상당한 수요가 있다. 차량 관리뿐만 아니라 취·등록세 등의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장기 렌터카는 법인에서 수요도 상당하다. 기업은 법인차량을 별도로 구매하는 대신 렌터카를 이용함으로써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렌터카업체가 차량 관리를 하므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렌터카 시장은 2023년 약 8.5조원 규모에서 2026년 10.4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하나증권 안도현 애널리스트는 "시중금리가 내려간다면 렌터카 사업은 확장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대성 기자 iunmids@

韓-불가리아, 신규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안덕근 장관, 양국 협력방안 모색

한국과 불가리아 정부가 원전 건설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분야를 구체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메리어트호텔에서 불가리아 에너지부 블라디미르 말리노프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중동 사태와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폭염과 태풍 등 극심한 이상기후가 빈번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안보 강화와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안 장관은 "불가리아는 원전(35%)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메리어트호텔에서 블라디미르 말리노프(Vladimir Malinov) 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과 양국 간 에너지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20%) 등 청정에너지를 발전 분야에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 또한 무탄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협력

가능성이 높다"며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 에너지 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019년 체결한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를 전면 개정해 새로 체결한 것이다. 정책교류와 원전, 재생에너지 등 기존 협력 분야에 액화천연가스(LNG), 에너지 저장, 공급망 등을 추가해 협력분야를 확대한게 골자다. 특히 원전 분야에서는 신규원전 건설, 계속운전, 원전해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소형모듈원전(SMR), 인력양성 등 협력 분야를 구체화했다.

안 장관은 이날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CFE)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자는 우리 정부의 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국제사회 확산을 위해 불가리아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사전 관리 중요... 자율적 책임의식 가져야"

>> 1면 '주소·신용카드 번호...'서 계속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치권이 나섰다. 지난 7월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을 알게 됐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 이를 알려야 하는 사항에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해외 호텔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다. 해외는 국내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자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해외 기업에도 적용된다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

에서 개인정보보호 유출 사고를 당하면 원칙적으로 해외 당국 법령에 따른 조사를 기다리거나 국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 국내 개인정보보호위가 해외 국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법규의 공백도 문제지만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과 같은 처벌 이전에 기업들이 먼저 고객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자율적인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현대 사회는 이제 모든 것이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법만으로 막을 수는 없다. 사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고객 정보 관리에 윤리적인 책임의식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